봄철 환절기 '감기' 주의보…"위생관리 중요"

일교차 큰 날씨에 독감 환자 급증
광주 5개구 보건소 방문자 260명
일선 병원도 북새통…대기줄 북적
"규칙적 운동·영양소 섭취 중요"

밤과 낮 일교차가 큰 환절기를 맞아 감기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29일 오전 광주시 북구의 한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시민들이 진료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김태규 기자

밤과 낮 일교차가 10도 이상 웃도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감기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데 이어 개강·개학으로 대면 접촉과 야외활동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면역력이 악한 영유아와 소아 사이에서 인플루엔자(독감)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호흡기 질환인 감기와 비염, 독감 등을 예방하기 위해선 철저한 개인 위생 관리와 마스크 착용 등 지역민들의 각별한 건강관리가 요구된다.

29일 광주지역 보건소와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최근 3개월(올해 1월~3월 27일)간 지역 5개 구청 보건소를 방문한 감기환자 수는 260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동구 20명, 서구 22명, 남구 29명, 북구 106명, 광산구 83명 등이다.

북구보건소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대면 활동 증가와 환절기 극심한 일교차로 인해 독감 환자가 급증, 보건소를 찾은 지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북구의 한 병원은 이른 시간부터 감기 증상 환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진료 순번을 기다리는 환자들은 저마다 고열과 기침, 콧물 등 감기 증상을 보였고, 대기환자는 평소보다 2~3배 많은 40~50명에 달했다.

북구 주민 김 모씨(42)는 "요근래 아침과 밤 일교차가 크다보니 감기 환자가 부쩍 많아진 것 같다"면서 "우리 아이도 얼마 전 유치원에 다녀온 후 감기 증상을 보여 병원을 찾게 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어 "오전 반가를 내고 병원에 왔더니 대기환자가 이렇게나 많을 줄 몰랐다"며 "평소 같았으면 10~20분 정도 기다리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 오늘은 40분 넘게 기다려야 진료를 받을 수 있을 정도다"고 토로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계절성 독감)가 여전히 유행 중인 만큼 어린이·임산부 중 예방접종 미접종자는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올해 10주차(지난 5~11일)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의 분율(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ILI)은 11.7명으로, 이번 절기 유행기준인 4.9명보다 2배 이상 높다.

특히 연령별로 보면 10주차 의사환자 분율은 만 7~12세에서 18.9명을 기록하며 가장 높았고, 직전주 14.6명보다 4.3명(29.5%) 상승했다.

인플루엔자는 고열, 오한, 두통, 근육통과 같은 전신증상과 함께 기침, 인후통과 같은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급성 열성 호흡기 질환으로 일반 감기와 흔히 혼동된다.

일반 감기와 증상이 유사해 며칠 안에 대부분 호전되지만, 폐렴 등 중증 합병증으로 발전할 수 있어 증상이 심하거나 노약자, 만성 질환이 있는 환자, 임산부 등 위험군은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

고영춘 광주기독병원 호흡기내과 진료과장은 "봄철 환절기는 기온 변화와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감기에 걸리기 쉬운 시기이다"며 "미세먼지와 바이러스 등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으며, 충분한 수면은 면역력 강화와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환준 기자

광주 모 농협 조합장 불법 토지매입 의혹

광주의 한 농협 조합장이 토지 매입과 관련한 의혹(본보 2023년 2월 21일자 7면)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광주 모 농협 현직 조합장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횡령·채용 비위 등을 저질렀다는 범죄 첩보도 잇따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여기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세운다는 명목으로 군사 보호 시설로 지정된 부지를 감정평가액보다 훨씬 비싸게 사들였다는 의혹도 추가돼 경찰은 이전 수사와 병합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다른 관계인들도 토지 매입 비위 의혹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최근 별도로 제출했다.

수사팀은 해당 농협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진행하지 않고, 농협 측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수사 초기 단계로 범죄 혐의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해당 농협 측은 "정당한 절차를 거친 토지 매입이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최환준 기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외교부 면담 거절

박진 외교부장관이 다음달 1일 강제동원 정부 해법을 거부한 피해 당사자 이춘식 할아버지를 면담하기로 한 가운데 또 다른 당사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는 면담을 거부했다.

29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외교부는 최근 대리인을 통해 박진 장관과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면담을 요청했다.

두 할머니는 이 할아버지와 함께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정부 해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면담 요청을 받은 양 할머니는 "외교부장관을 보지 않겠다"고 밝혔고, 김 할머니 역시 자녀를 통해 "외교부장관을 보는 것은 의미 없다"고 밝혀 대리인단이 그 뜻을 외교부에 전달했다. /민찬기 기자

무안군 리베이트 수사…군수 선거자금 출처 확대

전남경찰, 4급 공무원 사전 영장

군청 관급 계약 리베이트(사례비) 의혹을 규명하는 경찰 수사가 현직 군수의 선거자금 출처로 확대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안군 4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김산 무안군수의 선거캠프에서 일한 민간인 B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은 무안군과 8억원대 관급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로부터 계약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관급 계약 수주를 대가로 전달된 돈이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 김 군수의 재선을 위한 선거 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했다. /최환준 기자

음주운전 사고 현직 경찰, 시민 신고로 덜미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단독 사고를 낸 현직 경찰관이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경위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경위는 전날 오후 9시 50분께 남구 진월동 인근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찬기 기자